

Hansun Brief

발행일: 2018년 10월 15일(통권 73호) / 발행인: 박재완 / 발행처: 한반도선진화재단 / 서울 중구 퇴계로 197, 407호 / 전화: 02-2275-8391 / email: hansun@hansun.org / www.hansun.org



'9월 평양공동선언' 이후의 과제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

목 차

1. '신자주노선'의 위험한 질주
2. '평양공동선언'의 문제점
3. '평양공동선언' 이후의 과제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요 약

2018년 김정은 신년사의 핵심은 '핵있는 상태에서 민족공조'다. 이는 민족공조를 더욱 강조하면서 남북관계발전에 속도를 내는 신(新)자주노선의 동인이 되었다. 이 노선은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도출했다. 신(新)자주노선의 종착점이 '남북합작의 연방제'라는 소문도 있다. 가치 또는 이념을 무시한 남북합작의 연방제로의 질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그래서 신(新)자주노선의 질주가 위험하다는 평가다.

'평양공동선언'은 문제가 있다. 우선 탈(脫)냉전을 위해 북한의 대내 폭압성과 대외폭력성은 외면한 상태에서 한국의 변화를 통해 냉전구도를 해체하려는 접근은 잘못이다. 그리고 '북핵폐기'에 대한 실질적 진전의 성과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또한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위해 김정은의 선의에 의존해 스스로 무장해제를 했다는 점도 문제다. 경제-안보 교환 모델인 '평양선언'은 선(先)남북관계개선 후(後)비핵화의 구도이다. 이는 김정은의 '핵 있는 상태에서 민족공조'와 같은 맥락도 문제이다. 즉 '북한 핵을 용인하는 상태'에서 민족공조는 북한주도의 흡수적화통일을 용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한 전략적 구도이다. 그리고 경제-안보 교환모델은 국제공조의 제재의 틀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평화적 방법으로 북핵폐기의 길을 차단한다는 점도 문제이다.

'평양공동선언' 이후 한국의 대응과제는 '북핵폐기'라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제공조의 대북경제제재는 '군사적 옵션'을 막는 평화적 수단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북핵폐기를 위해 '민족공조의 선(先)남북관계개선 후(後)비핵화 구도'를 '국제공조의 선(先)비핵화 후(後)남북관계발전 구조'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북한주민들에게 '자유, 민주, 평등, 평화'와 같은 정신적 가치를 제공해 북한의 민주화와 북한 정상화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물론 북한인권문제도 국제공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국방안보전략의 핵심인 자강(自強)능력과 동맹능력강화에 주력해야 북핵위험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1. '신자주노선'의 위험한 질주

김정은의 2018년 신년사는 '신의 한수'였다. 그의 신년사가 대립과 충돌의 위기국면을 대화와 협력의 화해국면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수사(修辭)다. 2018년 신년사는 '국가 핵무력 완성'을 자축하면서 한편으로는 민족공조의 자주노선을 강조하고 있다. 즉 신년사는 한마디로 '핵 있는 상태에서의 민족공조'로 요약된다. 김정은이 민족공조를 다시 들고 나온 까닭은 한국정부의 친북적 정책기조를 감안한 전략적 기획물이다. 물론 북한의 민족공조는 한국의 묵시적 지원과 협력을 기대할 수 없었다면 불가능한 포석이었다. "여건이 되면 평양에 가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는 민족공조에 대한 묵시적 지원과 협조의 신호였다. 또한 민족공조는 핵문제를 희석시키고자 하는 기만전술의 각본이었다. 북한의 민족공조라는 각본은 한국정부의 우호적 성향과 결합하면서 신(新)자주노선을 진화·발전시키는 동력이 되었다. 민족공조에 기반한 신자주노선은 '핵있는 상태'를 용인하면서 지원과 협력에 주력하는 남북합작노선이다.

2018년 신자주노선의 첫걸음은 "우리민족끼리의 원칙에서 풀어나가려는 확고한 입장과 관점"을 강조한 김정은의 신년사에 대한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미화한 문재인정부의 화답이었다. 그리고 남북한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

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는 '4.27 판문점 선언'을 도출했다. '판문점 선언'은 민족의 장래를 숙의(熟議)하는 모습보다는 민족공조를 위한 이벤트에 치중하면서 신자주노선 강화에 주력하는 모습이였다. 물론 비핵화는 단지 구색 갖추기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판문점 선언'은 국가정체성과 안보가 실종되고 이벤트만 남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판문점 선언' 이후 우리 스스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려는 모습들이 포착되기도 했다. 북한산 석탄밀반입과 유류밀반출은 신자주노선을 강화하려는 조급증의 증거들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남북관계발전은 북미관계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다. 남북관계발전이야말로 한반도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이다"라면서 신자주노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서 남북정상은 9월 평양에서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두 손을 맞잡았다. 이처럼 남북합작의 '신자주노선'은 민족공조라는 이름으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도출해냈다.

앞으로 '신자주노선'이 어떤 명분으로 항해할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벌써 시중에서는 남북합작의 연방제 서막이라는 소문도 자자하다. 3차 남북정상회담이 결정된 직후 문대통령은 외신과의 인터뷰(9.7)에서

"남북관계를 연말까지 돌이킬 수 없게 진도를 낼 것"이라고 발언했다. '비가역적 남북관계의 진도'에는 한반도신경제지도의 완성과 남북연방제 구상의 의미가 내포되었다는 것이 세인들의 평가다. 연방제의 성공조건이 동일한 가치 또는 이념일 때에만 국가안정에 기여한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적 교훈이다. 그래서 신자주노선에 기반 한 남북연방제 구상은 '결코 바른 길이 아니다'라고 평가받는다.

2. '평양공동선언'의 문제점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극한대치의 냉전구도는 어찌보면 당연한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한의 냉전구도를 타파하기 위한 탈(脫)냉전구도를 위해 '평양공동선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일견 타당한 논리 같아 보인다. 이는 한반도 냉전구도의 원인이 북한의 대내 폭압성과 대외폭력성 때문이라는 사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이를 외면하고 오히려 탈냉전구조의 해체가 화해와 협력을 통해 가능한 것처럼 호도(糊塗)하고 있다. 그러나 냉전구도 해체는 화해와 협력이 아니라 강한 압박이라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다. 북한전체주의체제의 변화를 강제하려는 전략적 선택보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변화를 통해 냉전구도를 해체하는 모습은 분명 잘못된 접근이다.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 선언'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평양선언'은 '판문점선언'보다 더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선 '북핵폐기'와 관련한 명확한 내용이 없다는 비판이다. 물론金正은의 육성을 통해 '한반도비핵화'를 언급한 것이 성과라면 성과다. 하지만 '평양선언'에는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인식 공유'라는 차원에 머물러 있다. 특히 북핵폐기와 관련해金正은의 두 차례 구두약속 -'4.27 판문점 회담' 당시 '1년 이내 비핵화', 그리고 2차 대북 특사단 방북(9.5) 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2022.1)' 비핵화- 을 선언에 명문화하지 못했다는 점이다.金正은의 약속은 북핵폐기의 기한을 명시할 수 있는 주요한 발언이었다. 벌써金正은의 구두약속이 망각되고 있는 사정을 보면 안타까울 뿐이다. 특히 북한의 구두약속이 공수표가 된 전례를 볼 때 더욱 아쉬운 대목이다.

또한 '평양공동선언'은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이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한국군의 손발을 꽂꽂 묶었다는 진단이다. 한국이 전략적 우위인 해군·공군의 훈련중단과 군사력 증강정책 포기 등 대북방위능력이 무력화되었다고 한다. 우선 비무장지대(DMZ) 내 부대의 군사연습 중지는 훈련하지 않는 군대로 만들어 전투력을 반감시킬 우려가 제기되었다. 그리고 군사분계선 인근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함으로써 항공정찰자산과 항공전투자산의 항공방어활동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DMZ 내 감시초소(GP)는 북한은 160여개, 한국은 61개의 감시초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11개씩 동수철수에 동의함으로써 감시기능의 저하를 자초했다는 비판도 있다. 또한 서해 북방한계선을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해 수도권의 안보위협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이런 조치들은 모두 북한의 선의에 의존하고 있다. 문제는 북한의 선의가 언제라도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평화와 번영'의 미사여구로 치장된 2007년 10.4선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6차례의 핵실험은 북한에 기댄 선의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따라서 '평양공동선언'이 핵심 중의 하나인 안보전략은 북한의 선의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이 무시되었다. 따라서 '평양선언'은 안보전략의 상식을 저버린 역행적 선언이라는 점은 비판받아야 한다. 한편 '평양선언'에서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영구적 폐기'와 '미국이 상응조치에 따라 영변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는 미래핵에 대한 언급이다. 따라서 과거 및 현재 핵폐기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는 점은 문제다.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 선언'처럼 논리적 기반은 평화이론이다. 평화이론이란 경제교류를 통해 상호의존성을 높여 충돌(전쟁)을 방지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경제와 안보를 교환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 오겠다 생각이다. 문 대통령도 8.15경축사에서 언급한 "남북관계발전이야말로 한반도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이다"라는 언급은 경제와 안보의 교환모델이다. 선(先)남북관계개선 후(後)비핵화의 구도이다. 이는 김정은의 '핵 있는 상태에서 민족공조'에 동조하는 구도이다. 따라서 북핵을 용인하는 상태에서 민족공조는 매우 위험한 전략적 구도이다. 또한 이 구도는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밖에 없는 안보환경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후(後)비핵화는 '생존권 위협 = 인권침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평양공동선언'의 경제-안보 교환모델은 국제사회의 북핵폐기를 위한 노력에 찬물을 뿌리는 행위이다. 특히 2018년 김정은이 유화노선으로의 방향 선회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때문이다.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핵폐기의 평화적 수단이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그러나 선(先)남북관계개선의 구도는 대북제재의 구조적 허점(structural hole)을 우리가 만들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이처럼 한국이 북한과의 대화(對話)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구조적 허점은 불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북한과의 대화(對話)치중은 큰 화(大禍)를 자초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3. '평양공동선언' 이후의 과제

'평양공동선언'에서 북핵폐기의 목표가 경시되었다. 한국에는 핵무력이 없지만 북한은 핵무력이 있다. 따라서 북핵폐기가 올바른 용어이다. 그러나 북한이 '한반도비핵화'라는 용어를 고집하는 이유는 선전선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홍보전략 때문이다. 북한

중앙통신(2016.7.6)은 "비핵화는 조선반도전역의 비핵화이다. 여기에는 남핵폐기와 남조선주변(미국)의 비핵화가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마치 남한에 핵이 있는 것처럼 호도(糊塗)하는 용어전술이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반도비핵화'라는 용어를 남발하고 있다. 따라서 용어가 생각을 결정하는 도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반도비핵화' 대신 '북핵폐기'라는 용어를 사용해 북핵폐기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제제재를 하는 이유는 '북핵폐기'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경제제재는 비군사적 방법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이다. 즉 경제제재는 '군사적 옵션'을 막는 평화적 수단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경제제재는 강화되어야 한다는 정당성을 제공하는 것이며, 남북관계발전은 비핵화 이후 고려되어야 할 과제라는 점을 적시(摘示)해주고 있다. 따라서 '민족공조의 선(先)남북관계개선 후(後)비핵화 구도'를 '국제공조의 선(先)비핵화 후(後)남북관계발전 구조'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래야 북핵폐기를 통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

북한주민에 대한 다양한 외부정보가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남북관계발전은 경제적 문제에 국한되어 있다. 물론 '남북관계발전'을 통한 물질적 지원이 북한의 열악한 경제환경을 개선해주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북한주민들에게 외부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자유, 민주, 평등, 평화'의 가치를 제공하는 정신적 가치의 지원이라는 점이다. 이런 정신적 가치의 지원이 북한의 민주화와 북한 정상화의 초석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자유통일의 기반을 다질 수 있다.

국방안보전략의 핵심은 자강(自強)과 동맹이다. 자강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동맹은 부족한 자강능력을 보완해 준다. 그래서 한미동맹은 자강능력의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핵을 가진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강능력 제고와 한미동맹은 강화되어야 한다. 자강이 없으면 진정한 평화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특히 정부는 '평양공동선언'이 대한민국의 자강능력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 문자후원 보내주세요.^^
(한 통 2,000원)**